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가 아닌 책임을 부여하라!”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제정 촉구 민주노총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공동 기자회견

- 일시 : 2021년 8월 23일(월) 10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1. 취지

- 지난 1월 통과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령이 입법예고 되었고, 이에 대한 의견서 제출이 조만간 마감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제정 당시부터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제외라는 커다란 사각지대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대대부분의 중대한 조항을 시행령으로 위임한 미완의 법률이기도 합니다.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은 중대시민재해 관련 공중이용시설과 중대산업재해 관련 직업성 질병자의 정의를 위임받고 있고,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범위’등을 세부적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행령이 입법예고된 뒤 여러 토론회가 개최되고 있지만 중대재해법의 입법취지와 시행령이 부합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 민주노총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정부가 내놓은 시행령의 잘못된 부분과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고, 노동자·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을 위해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된 시행령을 올바르게 고쳐 나가려고자 합니다.
- 이에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8월 23일(월) 오전 10시에 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끝)

2. 프로그램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가 아닌 책임을 부여하라”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민주노총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공동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1년 8월 23일(월)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민주노총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 프로그램
 - 사회 : 참여연대
 - 여는말 : 민주노총 이태의 노동안전보건위원장(부위원장,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 여는말 : 산재참사 피해 유가족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운동본부 공동대표)
 - 발언 1. 재해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이행에 관한 의무 제대로 명시하라
: 김용균재단 권미정 사무처장
 - 발언 2. 안전보건 관계법령, 직업성 질병 범위 전면 확대하라
: 민주노총 화학섬유연맹 현재순 노동안전보건실
 - 발언 3. 제대로 된 중대 시민재해 시행령 제정하라
: 생명안전시민넷 김혜진 공동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반올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